

#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가 투표 참여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박상훈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정치학\*\*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일종의 임기만료 선거에 보완적이며 종속적인 선거라고 간주하고 중간평가 모델, 선거 운동 모델, 또는 투표율 모델을 통해 분석해 왔다. 본 연구는 유권자가 재·보궐 선거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투표 참여와 선택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석 결과, 유권자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및 사퇴하여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비하여 직전 총선의 당선자가 비위를 저질러 사퇴하게 되었을 때,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위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야기한 정당이 재·보궐 선거에 재차 후보자를 내었을 때, 유권자들은 해당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 유권자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 엘리트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표 참여 및 선택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재·보궐 선거, 투표율, 투표 참여, 투표 선택, 선거 책임성

\* 논문의 수정을 위해 귀중한 논평과 도움을 주신 익명의 3인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발전을 위해 흔쾌히 연구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주신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조진만 교수님과 연구의 과정 중에 많은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이재목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pherephobia@gmail.com

## I. 서론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집합적 수준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재·보궐 선거란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 임기만료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사직 또는 사퇴하게 되어 궐석(闕席)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 선거는 대개 당선된 사람이 없거나 부정 선거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모종의 사유로 인해 그 직위를 잃었을 때 치러진다. 기존 연구들은 궐위된 지역에 한하여 실시되며, 궐위된 자리의 잔여 임기만을 보장하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선거 임기만료 선거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투표 선택은 임기만료 선거에 부차적이거나 혹은 종속적일 것으로 기대해 왔다(조진만·최준영 2011; 박명호·양병하 2016).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전국단위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지방선거(지선)의 경우는 투표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일부 도시에 서만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전의 참여 결과가 무위로 돌아간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재·보궐 선거는 정치 지도자 및 정당에게 있어서는 임기만료 선거 기간 사이 유권자들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투표를 통한 보상(reward)과 처벌(penalty)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한정택 2015).

또한 재·보궐 선거는 다른 임기만료 선거에 비하여 두 가지 명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한다. 바로 재·보궐 선거의 시행 사유와 퇴진하는 현직자의 소속 정당이다. 이 정보는 다른 임기만료 선거에서 공유되는 정보들에 비해 간략하면서도 정확하며, 획득하는 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의 이 같은 차별적 특징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를 관

런 언론 기사 등을 추적하여 수집하였다.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합리적 이되 근시안적(myopic) 행위자로서 현직자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사직 및 사퇴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을 시, 해당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그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재·보궐 선거에 또 후보를 낼 경우, 선거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벌의 목적을 가진 투표 선택을 할 것이다. 즉, 재·보궐 선거가 갖는 특징은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 책임성을 묻는 투표 참여와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분석 결과, 비위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른 경우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 및 사퇴하여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비하여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또한 비위로 인한 사직 및 사퇴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는 사퇴한 전직자가 속한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당선 예측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 더하여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선택에 관련하여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II. 이론적 논의

### 1. 한국의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이하 재·보궐 선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두 선거 유형 모두 국회의원 또는 기초 및 광역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원 등의 선출직 정치인의 자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비게 되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이 경우, 재·보궐 선거의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게 된다.

엄밀하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그 시행 사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혹은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의 사유는 크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와 임기 전 피선거권을 상실하

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가 있다. 한편 보궐선거는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임기 중 사퇴, 사망, 혹은 불법적 행위로 실형을 확정 받아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꺾임(闕位)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이다. 결국 두 선거 모두 선출직 정치인을 재추원(replacement)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같은 층위에서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조진만·최준영 2011, 345).

기존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선거 결과를 분석해 왔다. 박명호(2006)는 기존의 집단 수준, 개인 수준의 요인들을 2005년 4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로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보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 역시 2005년 4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 선거들 및 제17대 총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신두철 2007). 분석 결과, 2005년 4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여당 득표율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지역적 특성으로 선거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선거운동 모델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에 관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단 하나의 특정한 선거가 아닌 통시적으로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출구조사 및 선거 전후 설문조사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임기만료 선거와는 달리 재·보궐 선거는 미시적 수준에서 유권자들의 선호 및 선택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합적 수준의 자료를 대상으로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련의 연구는 전국단위의 임기만료 선거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들이 재·보궐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와 결과를 설명하는가를 검증하는, 확정형 연구(confirmatory research)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진만 외(2006)는 재·보궐 선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중간평가 모델로 재·보궐 선거가 선거 이전까지의 정부 정책과 업적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기만료 선거에서 투표 참여와 선거 결과

를 이전 집권 여당 또는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재·보궐 선거의 맥락에서 재고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재·보궐 선거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쪼갬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문제와 무관하게 선거구의 정당조직 수준의 차이나 선거 전략 등과 같은 지역적 수준의 요인으로 인하여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 선거운동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투표율 모델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수록 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투표 참여가 높을수록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또는 선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 이론적 틀로부터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 가설들을 도출한 뒤, 집합적 수준에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어떤 모델이 한국의 재·보궐 선거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의 확장을 통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유지되는지(조진만 2009), 혹은 임기만료 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재·보궐 선거에서도 투영되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최준영·조진만 2011).

한편, 재·보궐 선거라는 유형 내부에서 나타나는 투표 참여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다. 재·보궐 선거의 저조한 투표 참여가 임기만료 선거에 비해 정치적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재·보궐 선거 내 정치적 비중의 차이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미치는 효과 역시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진만·최준영(2011)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분석 대상으로 특정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투표율이 높을 것이며, 높은 투표율은 여당의 승리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양병하·한기영(2016)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대상으로 조진만·최준영(2011)과 같은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조진만·최준영(2011)은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었을 때, 기대와는 달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적 비중을 보여주기 위해 조작화된 변수<sup>1)</sup>가 증가할수록 투

1) 조진만·최준영(2011)은 재·보궐 선거 간 정치적 비중 차이를 두 차원으로 축약하여 조작화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몇 개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는지, 강한 지역주의를 보이는 영남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경험적 지역에서 실시되는지를 조합하여 측정한다. 두 번째 차원은 재·보궐

표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양병하·한기영(2016)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치적 비중이 증가할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2)</sup>

## 2. 재·보궐 선거와 선거 책임성

우리나라의 재·보궐 선거는 크게 중앙정치의 특성을 반영할 것인지(중간평가 모델) 혹은 지역적/선거 단위의 특성을 따를 것인지(선거운동 모델)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재·보궐 선거는 종종 집권여당 또는 정부에 대한 평가나 선거 시점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투표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중간 평가적 속성을 갖는다(강원택 2004; 박명호 2006; 조진만 1998). 동시에 우리나라의 선거지형은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균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Kim et al. 2008; Kim 2019; Kim and Park 2018). 이는 재·보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지역주의 균열에 힘입어 인물의 교체만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강원택 2004).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접근법은 모두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날 유권자의 투표 참여 및 투표 선택이 다른 임기만료 선거나 우리나라 선거 구조에 종속적으로 결정된다고 간주한다.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선택은 중앙정치 또는 지역정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역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그 자체가 가지는 차별적인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보궐 선거는 대선, 총선, 지선과 같이 정치적 비중이 큰 전국선거에서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철회 기권을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감수해야 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상대적으로 적다(Buchanan and Tullock 1962; 강원택 2004; 조진만·최준영 2011,

---

선거가 중요한 전국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얼마나 압박하여 실시되는가를 측정한다.

2) 양병하·한기영(2016)은 지방선거의 맥락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유형으로 정치적 비중을 순위형으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병하·한기영(2016)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적 비중이 투표 참여와 갖는 관계를 조진만·최준영(2011)이 보여주는 정치적 비중과 투표 참여 간 관계와 직접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50).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총원은 적을 때는 273명(제16대)부터 300명(제20~21대) 사이에서 변동해왔고, 그중 지역구로 선출되는 인원은 224명(제13대)에서 253명(제20~21대)으로 지역구 의원의 비율이 국회의원 정수의 약 74.9%(제13대)에서 약 84.6%(제15대)를 차지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를 결정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에 따른 투표 선택의 제약이 존재해왔다.<sup>3)</sup>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의 영향하에서 단순다수를 득표하는 정당이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은 과대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자신의 한 표를 승률이 낮은 정당에게 던질 경우, 그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보다는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Duverger 1954; Cox 1997). 따라서 총선에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거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여야 간 균형적 통제를 위해서 투표하는 비판적 자질을 보여 왔다(조성대 2020, 128). 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낮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선거구제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투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제약이 존재한다. 즉, 기존의 거대 양당이 후보자를 총원 및 출마시키는 한 유권자들은 재·보궐 선거라고 하더라도 거대 양당 후보자라는 선택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는 임기만료 선거에 비해 그들의 투표 행태가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 기대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되, 그 결과에

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원 300명에 지역구 의원은 253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전체 의원 정수의 약 84.3%를 차지하고 있다.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Ferejohn 1986; Przeworski 1999).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경제적 성과나 국정 운영에 대해 회고적 또는 전망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Anderson 2007).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현직자를 재신임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총선, 그리고 지선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벌투표(reward-punishment voting)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권혁용 2008; 강우진 2013; 강원택 2008; 배은진·엄기홍 2016; 이내영·안종기 2013; 이재철 2008). 하지만 이러한 상벌투표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 평가하여 투표 선택에 반영하고자 하지만 종종 실패하고는 한다(Golden 2005). 예를 들어, 강원택(2012)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의 총선 이후 대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부정행위나 부패에 대하여 그 정치인이 연루된 부정행위의 경제적 외부효과(economic externalities)에 따라 조건적으로 상벌투표를 수행할 수 있다. 선출직 정치인이 행한 일종의 부정행위가 지역의 경제 활동에 이익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거나 그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Fernández-Vázquez et al. 2016; Weschle 2016; Winters and Weitz-Shapiro 2013). 이는 유권자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 최근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근시안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Healy and Lenz 2014; Achen and Bartels 2016).

유권자들의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와 그 결과는 분명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역학, 또는 선거운동 조직의 캠페인 활동과 같은 요인들 이외에도 선출된 정치인의 부정행위 등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또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역학에 대한 고려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과 누구에게, 왜 '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권자들은 실시된 재·보궐 선거 자체를 준거로 삼아 선거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 가설

재·보궐 선거의 시행 사유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출된 정치인이 일신상의 문제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사망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하여 사퇴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불법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어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비위로 인한 궐위가 존재할 수 있다.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 참여 및 선택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인구학적 요인과 정치·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참여 및 선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반면, 재·보궐 선거의 경우 유권자는 두 가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당 재·보궐 선거가 왜 실시되는가와 그 정치인을 직전에 임기만료 선거에서 공천한 정당이다. 적어도 유권자들은 전직자가 다른 선출직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였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어 선거 및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때,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지역적 특성 등과 무관하게 주어진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의 시행 사유를 제공한 후보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선호를 투표 참여 및 선택에 반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유권자들은 청렴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기를 원할 것이다(Bratton et al. 2004; Winters and Weitz-Shapiro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재·보궐 선거가 불법적 혹은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된 경우, 유권자들은 같은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에 동원될 수 있다(Escaleras et al. 2012; Karahan et al. 2006). 반면, 재·보궐 선거가 이전의 임기만료 선거의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회의와 불신 등으로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할 유인을 얻지 못할 수 있다(Stockemer et al. 2013). 그리고 재·보궐 선거가 전직자의 불법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때, 유권자들의 실망은 더욱 클 것이고 투표

참여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Simpser 2012; Sundström and Stockemer 2015).

하지만 이제까지의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발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일종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창구로 작동해 왔다(강원택 2004; 조진만 2009; 조진만 외 2006; 최준영·조진만 2011). 재·보궐 선거 내에서 그러한 불만은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현직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보궐 선거는 임기만료 선거에 비하여 유권자가 중앙정치 혹은 지역적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와 해당 선거가 불법적 귀책사유로 인해 실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의 유권자는 불법적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한 선거를 시행하게 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전과 같은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적 기대로부터 첫 번째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가설1. 재·보궐 선거가 직전 당선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시된 것일 경우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다.

유권자는 재·보궐 선거에서 전직자를 직접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권자는 재·보궐 선거에 진입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누가 전직자를 승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때, 정당이 유권자에게 정보의 지름길(shortcut)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양병하·한기영 2016)으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보궐 선거에 진입한 후보자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즉,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귀책사유를 제공한 후보자가 재출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전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전직자와 동일한 소속 정당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처벌적 투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직자가 불법적 이유로 이전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무효화한 경우에 이러한 처벌적 투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대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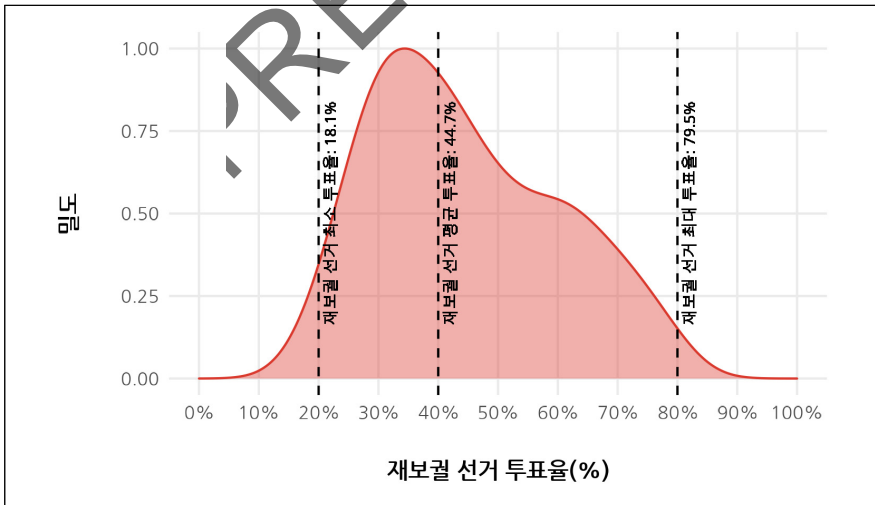
가설 2. 직전 당선자의 위법행위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경우, 직전 당선자와 동일한 정당에 속한 후보자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낮을 것이다.

## 2. 연구 자료와 방법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민주화 이후 1989년 4월 14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46개 선거에 대한 집합 수준의 자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찬한 『대한민국선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1989년 4월 14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 A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보궐 선거에 있어 투표 참여와 결과에 대한 두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종속변수: 재·보궐 선거 투표율의 분포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은 각 선거구에서의 총 유권자 수를 총 투표인 수로 나누는 후 100을 곱한 재·보궐 선거 투표율로 조작화하였다(〈그림 1〉 참고). 전체 146개 재·보궐 선거 중에서 무투표 당선이 있었던 1997년 12월 28일 광주시 동구의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 145개 재·보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은 2006년 7월 26일 서울시 송파구갑 재·보궐 선거로 약 18.1%였으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은 2022년 3월 9일 서울시 서초구갑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로 약 79.5%였다.

투표 참여 모델의 주요 예측변수인 재·보궐 시행 사유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별적 시행 사유들의 집합으로 사망, 사직, 사퇴, 당선무효, 선거무효,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상실로 측정된 변수를 연구 가설에 맞추어 재조작화한 분류형 변수이다.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는 당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언론 기사 등을 추적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및 사퇴한 경우로 선출된 정치인이 사망하였거나 혹은 다른 선출직으로의 출마 등을 위해 현직에서 임기 도중 물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비위로 인한 자진 사직 및 사퇴로,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사법적 실행이 확정되기 전 현직자가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비위로 인한 강제 사직 및 사퇴로 불법적 행위의 결과 실행이 확정되어 사법적으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판정을 받아 선출직이 궤위가 된 경우를 말한다. 비위로 인한 자진 사직/사퇴와 강제 사직/사퇴를 구분한 이유는 재·보궐 선거에서 시행 사유가 선거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고 기대하는 만큼, 비위를 저질렀으나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경우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경우에 대해 유권자들이 책임을 묻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개별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를 추적하여 재조작한 결과, 비위로 인한 사법적 당선 및 선거무효로 재·보궐이 실시된 사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및 사퇴한 경우가 59건, 마지막으로 비위로 인한 자진 사직 및 사퇴한 경우가 13건 순이었다(〈표 1〉 참고). 재·보궐 시행 사유 변수는 원변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자진 사퇴 및 사직, 비위로 인한 자진 사퇴 및 사직, 그리고 비위로 인한 강제 사퇴의 3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 마지막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사퇴 대 비위로 인한 사직/사퇴로 조작화된 이항변수 등으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표 1〉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

구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사퇴	비위로 인한 자진 사직/사퇴	비위로 인한 사법적 당선/선거무효 (강제 사직/사퇴)
사망	17	0	0
사직	42	6	1
사퇴	0	5	0
당선무효	0	2	52
선거무효	0	0	10
의원직상실	0	0	4
피선거권상실	0	0	7
총합	59	13	74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확장된 시점의 재·보궐 선거들에서도 유의미한지, 또 한 기존 연구들의 설명하에서 본 연구의 주장이 유의미하게 종속변수를 설명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급적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통제변수들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먼저, 중간평가 모델이 주장 하듯,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중앙정치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조진만(2009)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거나 낮을 때,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보상 및 처벌을 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중간 정도 수준일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의 낮은 정치적 비중으로 인해 저조한 투표 참여를 보이는, 비선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투표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양병하·한기영(2016, 230)은 조진만(2009)에서 제시하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투표율 간의 관계에는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그 정도에 따라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간의 투표 참여를 기권으로 상쇄하여 투표율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자료 중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분기에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sup>4)</sup>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또는 결과가 선거구의 정당 간 우열, 후보들의 능력

및 지역적 선거 전략과 같은 지역적 특성들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선거운동 모델에 따라 재·보궐 선거가 얼마나 경합적이었는가를 측정하는 선거 경합도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선거구가 여당이 유리한 지역과 야당이 유리한 지역, 그리고 경합 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류형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선거정치에서 지역균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라 정부 임기별로 각각 여당과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였다(Kim et al. 2008; 조진만 2009). 최근 치러진 일련의 선거들은 지역균열이 점차 와해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새로운 균열이 부상하였다거나 기존의 지역균열이 투표 참여와 선거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진만(2009)과 같이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열 변수를 코딩하였다.

〈표 2〉 역대 정부별 지역균열 분류

역대 정부 구분	여당 유리 지역	야당 유리 지역	경합 지역
노태우 정부	대구 및 경북 지역 (3당 합당 이전) 영남 지역 (3당 합당 이후)	호남 지역	그 외 기타 지역
김영삼 정부	부산 및 경남 지역 (초기) <sup>4)</sup> 영남 지역 (중·후기)	호남 지역	
김대중 정부	호남 지역	영남 지역	
노무현 정부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이명박 정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박근혜 정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문재인 정부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윤석열 정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출처: 조진만(2009)에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 범주를 확장하여 작성

4)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용성 측면에서 1988년부터 분기별로 제공되는 한국갤럽의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귀하는 ○○○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한 뒤, 긍정 및 부정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재질문을 통해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 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라는 응답으로 최종 긍정 및 부정의 이항변수로 코딩한 뒤, 백분율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5) 본 연구의 대상인 재·보궐 선거를 기준으로 1993년 4월 23일과 1994년 8월 2일 사이에 실시된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열이 추가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에 대한 대구 및 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견고한 지지가 이어졌다는 점과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성장하고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각각 민주통합당(야당)과 새누리당(여당)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은 여당 유리 지역으로, 호남 지역은 야당 유리 지역으로 간주한다(윤광일 2013). 다만 제18대 대선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문재인이 부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리 대구/경북과 결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부산/울산/경남의 유권자들이 유의미하게 문재인 지지를 보이지 않았으며(윤광일 2013), 득표율에 있어서도 영남에서 박근혜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지병근 2013) 등을 고려해볼 때, 영남 지역 전체를 박근혜 정부 시기 여당 유리 지역으로 고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지역주의는 일부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영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출신 당선자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제19대 대선에서는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강한 지역주의적 편향을 보여준 것에 비하여 부산/울산/경남 출신 유권자들 중 일부가 기존과는 다른 투표 선택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영호남 지역 균열이 대구/경북과 호남의 지역균열로 재편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 출신 유권자들은 대구/경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윤광일 2019),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7개 의석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미래통합당에 대해 지역적 연고에 기반을 둔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유리 지역을 호남 지역으로, 야당 유리 지역을 영남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존의 정치학 담론에서 논의 되어온 정당일체감, 정당이념보다도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차악에

---

재·보궐 선거는 김영삼 정부 초기에 시행된 선거, 이후부터 1997년 9월 4일 사이에 실시된 재·보궐 선거는 김영삼 정부 중·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투표하는 것과 같은 이전과는 차별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윤왕희 2022). 정책적 경쟁보다는 양극화, 계급, 젠더, 세대 등과 같은 사회의 갈등구조가 집약되어 선거 기간 내내 진영 간의 마타도어가 이어졌다(윤지환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제19대 대선이나 제21대 총선에 비하여 부산/울산/경남 역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보임으로써 다시금 호남대 영남 구도로 득표율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 유리 지역으로 영남 지역을, 야당 유리 지역으로 호남 지역을 간주하고, 이외의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직전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구의 경우, 집합적 수준에서 그것이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서인지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선거 유형에서도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경로의존적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재·보궐 선거구의 투표율을 모델에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이외에 정치적 비중의 차이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기대에 따라 동시에 개최된 재·보궐 선거의 수와 향후의 인접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 간의 일자 차이를 조작화하여 모델에 포함하였다. 먼저 재·보궐 선거의 수의 경우, 동시에 시행된 재·보궐 선거의 수( $n$ )를 역수로 삼아  $1/n$ 로 만든 후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을 곱하였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만약 재·보궐 선거가 단 하나만 실시되었다면 이 변수의 값은 100, 10개의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었다면 10으로, 그 값이 클수록 개별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높다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변수가 된다. 재·보궐 선거 이후에 있을 인접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 일자 간의 차이는 자연로그 값을 취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변수는 인접 국회의원 선거와의 거리의 1%p 변화와 재·보궐 선거 투표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2013년 보궐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의 적용 유무를 이항변수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사전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있어서 공간적 또는 시간적 비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기존의 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는 동원



효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윤기쁨·엄기홍 2016). 그리고 임기만료 선거에 비하여 추가적인 투표 비용을 요구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러한 편의 제공을 통한 비용 감소가 투표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보궐 선거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다중선행회귀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투표 참여 모델: 지역주의  $\in$  {경합 지역, 여당 유리 지역, 야당 유리 지역} 이라고 할 때,

$$\begin{aligned} \text{재보궐 선거 투표율}_i = & \beta_0 + \beta_1 I(\text{재보궐 시행 사유})_i + \beta_2 \text{선거 경합도}_i \\ & + \beta_3 \text{직전 총선 투표율}_i + \beta_4 \text{사전투표제}_i + \beta_5 \text{선거 중요도}_i \\ & + \beta_6 \log(\text{인접 총선일}_i) + \beta_7 \text{대통령 지지율}_i \\ & + \beta_8 (\text{대통령 지지율}_i)^2 + \beta_9 I(\text{지역주의}=\text{여당 유리 지역})_i \\ & + \beta_{10} I(\text{지역주의}=\text{야당 유리 지역})_i + \epsilon_i \end{aligned}$$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재·보궐 선거가 전직자의 비위로 인해 실시된 것일 경우에 동일한 정당의 후보가 재·보궐에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속변수는 전직자와 재·보궐 선거의 당선자가 동일한 정당 소속인지의 여부의 이항변수이다. 투표 선택 모델의 주요 예측변수는 해당 재·보궐이 전직자의 비위로 인해 실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투표 참여 모델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선거 경합도, 지역주의 변수들은 투표 참여 모델과 동일하게 통제되었다. 선거구의 특성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계속 당선되어 왔을 경우, 선거 경합도가 높을수록 같은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투표 선택 모델에서는 당선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을 대리하여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당선자의 선수(選數)가 별도로 통제되었다.<sup>6)</sup> 또한, 지역균열이 유

6) 인구학적 변수로 당선자의 성별은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권자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재·보궐 선거와 경합 지역, 여당 유리 지역, 야당 유리 지역 각각에 대한 모델을 적합하였다. 대통령 지지율과 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여당 후보 여부도 통제하였다. 반면에 직전 당선자와 동일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의 유무로 측정된 투표 결과에 있어서, 선거 중요도와 자연로그를 취한 인접 총선일과의 일자 차이, 사전투표제의 유무와 직전 총선 투표율을 측정된 변수는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워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립하였다.

투표 결과 모델:  $P_r(\text{직전자와 동일 정당 소속 후보자 당선}=1)=\pi$ 이며,  
지역주의  $\in$  {경합 지역, 여당 유리 지역, 야당 유리 지역}  
이라고 할 때,

$$\begin{aligned} \log\left(\frac{\pi}{1-\pi}\right) = & \beta_0 + \beta_1 I(\text{비위로 인한 재보궐 여부})_i + \beta_2 \text{선거 경합도}_i \\ & + \beta_3 \text{당선자 선수}_i + \beta_4 \text{대통령 지지율}_i + \beta_5 I(\text{여당 당선자=여당})_i \\ & + \beta_6 I(\text{지역주의=여당 유리 지역})_i \\ & + \beta_7 I(\text{지역주의=야당 유리 지역})_i + \epsilon_i \end{aligned}$$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른 투표 참여 모델과 투표 선택 모델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사용하는 표본에서 전체 146개 재·보궐 선거 중 당선자가 여성인 경우는 9개 선거로 사례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성별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더라도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7) <표 1>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 중 비위로 인한 자진 사직 및 사퇴는 총 13건에 불과하다. 이론적 기대에 따라 비위로 인한 사법부의 강제 사직 및 사퇴와 차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투표 참여 모델에 포함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투표 결과 모델에서는 비위로 인한 사직 및 사퇴라는 분류로 통합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및 사퇴한 경우와 비위로 인한 사직 및 사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사례 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일신상 사유로 사직/ 사퇴	재·보궐 투표율	58	42.44	15.70	40.12	18.12	78.17	
	선거중요도	59	23.53	22.61	14.29	6.67	100.00	
	Log(인접 총선일)	59	6.47	0.24	6.44	5.86	7.04	
	대통령 지지도	59	46.72	19.59	50.00	8.70	84.80	
	지역주의	경합 지역	34	0.58				
		여당 지지 지역	9	0.15				
		야당 지지 지역	16	0.27				
	선거 경합도	58	67.97	21.78	72.89	21.69	98.82	
	직전 총선 투표율	59	59.70	9.14	59.36	41.16	85.06	
	사전투표제	58	0.41	0.50	0.00	0.00	1.00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의 재당선 여부	59	0.44	0.50	0.00	0.00	1.00	
	당선자 당적	여당	32	0.54				
		야당	27	0.46				
	당선자 선수	59	1.59	1.19	1.00	1.00	6.00	
비위로 사직/ 사퇴	재·보궐 투표율	87	46.22	15.40	42.14	19.32	79.47	
	선거중요도	87	27.25	20.61	25.00	6.67	100.00	
	Log(인접 총선일)	87	6.56	0.38	6.58	5.76	7.00	
	대통령 지지도	87	41.75	20.74	35.90	8.70	86.50	
	지역주의	경합 지역	46	0.53				
		여당 지지 지역	15	0.17				
		야당 지지 지역	26	0.30				
	선거 경합도	87	66.12	20.83	68.44	17.84	96.93	
	직전 총선 투표율	87	59.15	10.07	58.73	36.52	82.50	
	사전투표제	87	0.29	0.46	0.00	0.00	1.00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의 재당선 여부	87	0.25	0.44	0.00	0.00	1.00	
	당선자 당적	여당	32	0.37				
		야당	55	0.63				
	당선자 선수	87	1.90	1.34	1.00	1.00	6.00	

## IV. 경험분석

### 1. 투표 참여 모델

〈표 4〉은 첫 번째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투표 참여 모델로 재·보궐 선거 투표율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와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제시한다. 〈모델 1〉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전직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자진 사직 및 사퇴한 경우를 기준으로 비위를 저지른 후 자진 사직 및 사퇴한 경우와 비위로 인해 사법적으로 강제 사직 및 사퇴한 경우가 각각 재·보궐 선거 투표율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재·보궐 선거구의 전직자가 일신상 이유로 인해 자진 사직 및 사퇴한 것에 비해 비위를 저질러 강제 사직 및 사퇴한 경우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약 4.37%p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진 사직 및 사퇴에 있어서 그 사유가 비위인 경우와 일신상의 이유인 경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은 비위로 인한 사직 및 사퇴를 사유 구분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 및 사퇴와 비교한 것이다. 재·보궐 선거가 비위로 인한 사직 및 사퇴로 인해 실시된 것일 경우, 일신상의 이유로 실시된 선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4.6%p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보궐 선거 투표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종속변수: 재·보궐 선거 투표율		
		모델 1	모델 2	모델 3
재·보궐 시행 사유 (사망 = 1)	사직			2.82 (3.11)
	사퇴			6.14 (5.54)
	선거무효			15.71*** (4.57)
	의원직상실			-1.8 (5.74)
	피선거권상실			6.38 (4.54)
	당선무효			5.03 (2.82)

변수명		종속변수: 재·보궐 선거 투표율		
		모델 1	모델 2	모델 3
재·보궐 시행 사유 (일신상 이유로 인한 자진 사퇴 = 1)	비위로 인한 자진 사퇴	5.65 (3.16)		
	비위로 인한 강제 사퇴	4.37* (1.77)		
재·보궐 시행 사유: 비위로 인한 사직/사퇴 (일신상 이유로 인한 자진 사퇴 = 0)			4.60** (1.67)	
선거 경험도		0.13** (0.04)	0.13** (0.04)	0.12** (0.04)
직전 총선 투표율		0.91*** (0.10)	0.91*** (0.1)	1.02*** (0.11)
사전투표제		8.86*** (2.05)	8.77*** (2.03)	10.35*** (2.15)
선거중요도		0.16*** (0.04)	0.16*** (0.04)	0.17*** (0.05)
Ln(인접 총선일)		7.86** (2.51)	7.81** (2.49)	4.65 (2.82)
대통령 국정지지도		0.41 (0.22)	0.42 (0.22)	0.31 (0.23)
대통령 국정지지도 <sup>2</sup>		0.00 (0.00)	0.00 (0.00)	0.00 (0.00)
여당 유리 지역		4.02 (2.28)	4.04 (2.28)	2.58 (2.34)
야당 유리 지역		7.57*** (1.88)	7.51*** (1.87)	7.54*** (-1.87)
(상수항)		-92.88*** (18.18)	-93.19*** (18.11)	-78.68*** (-20.21)
AIC		1,080.05	1,078.22	1,078.22
BIC		1,118.75	1,113.94	1,113.94
R <sup>2</sup>		0.65	0.65	0.67
Adjusted R <sup>2</sup>		0.62	0.62	0.63
사례 수(N)		145	145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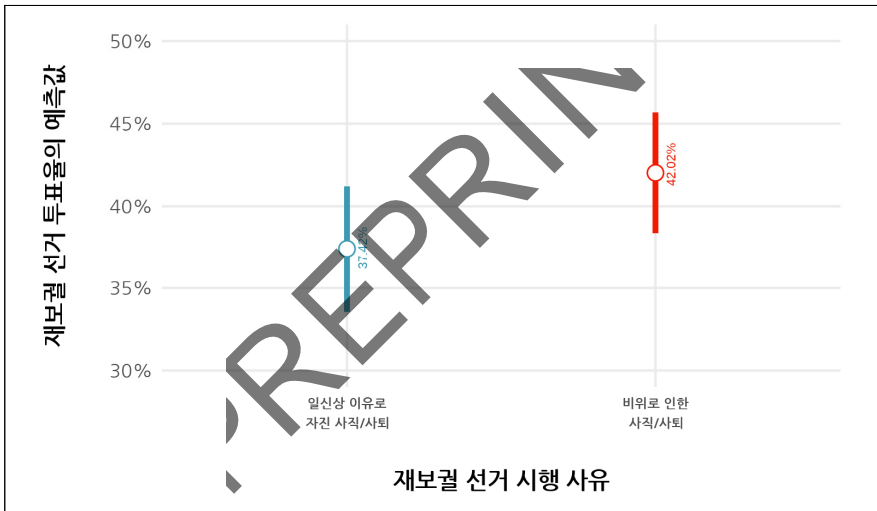
주: \*\*\*  $p < 0.001$ , \*\*  $p < 0.01$ , \*  $p < 0.05$ . 괄호 안은 표준오차.

<모델 1>과 <모델 2>의 분석 결과는 첫 번째 연구 가설의 이론적 기대와 같이, 재·보궐 선거가 직전 당선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실시된 것일 경우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유권자들은 불법을 저질러 재·보궐 선거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그리고 이전 민주적 투표 참여의 결과를 무위로 되돌리는 결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투표 참여에 있

어서 더 적극적인, 심판적 투표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충분한 경험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모델 2〉의 조작화된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른 재·보궐 선거 투표율의 예측값(predicted values)을 보여주고 있다.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사직한 경우에 비하여 비위로 인해 사직/사퇴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예측값이 평균적으로 약 4.6%p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른 재·보궐 선거 투표율의 예측값



## 2. 투표 결과 모델

두 번째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투표 결과 모델을 수립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보궐 선거를 실시한 사유를 제공한 전직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재·보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지 유무이다. 사직 및 퇴직한 전직자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동일한 경우는 표본 내에서 총 세 건으로 두 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한 건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인한 것이다.<sup>8)</sup> 두 번째 가설

은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가 비위로 인한 것이었을 때, 전직자와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같은 중복자들 역시 표본에 포함되었다.

주요 예측변수는 해당 재·보궐 선거가 전직자의 비위로 인한 사직/사퇴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이다. <모델 1>은 다른 조건들이 모두 일정할 때, 비위로 인해 재·보궐이 실시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전직자와 동일 정당의 후보가 재·보궐에 당선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임기만료 선거와 재·보궐 선거 모두에서 지역균열이 유의미하게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모델 1>의 투표 선택 모델을 지역균열에 따라 여당 유리 지역, 야당 유리 지역, 그리고 그 외의 경합 지역으로 표본을 나누어 적합하여 지역균열에 따른 비위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가 전직자와 동일 정당 후보의 당선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당 유리 지역에서는 비위로 인한 재·보궐 여부가 당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유리 지역에서도 재·보궐이 비위로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선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같은 중앙 정치적 요인이 당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합 지역에서는 비위로 인해 실시된 재·보궐일 경우 그리고 경쟁적인 선거일수록,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전직자와 동일한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

8)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각각 제13대 국회의 홍희표 의원, 제16대 국회의 최돈웅 의원이며 타 선출직 출마로 인한 사직은 제17대 국회의 맹형규 의원이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5〉 재·보궐 선거를 야기한 정당 후보의 재·보궐 당선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종속변수: 직전 당선자와 동일 정당 후보의 재·보궐에 당선 여부			
		모델 1: 전체	모델 2: 여당 유리 지역	모델 3: 야당 유리 지역	모델 4: 경합 지역
비위 사퇴로 인한 재·보궐 여부		-1.00* (0.41)	-0.83 (1.29)	-1.19 (1.54)	-1.43* (0.58)
선거 경합도		-0.02 (0.01)	0.01 (0.03)	0.01 (0.02)	-0.03* (0.01)
당선자 선수		-0.02 (0.16)	0.63 (0.47)	-2.93 (1.54)	-0.05 (0.25)
여당 후보자		1.11* (0.49)	3.02 (1.87)	-0.40 (1.46)	1.52* (0.70)
대통령 국정지지도		-0.05*** (0.01)	-0.03 (0.04)	-0.17* (0.07)	-0.04* (0.02)
지역주의 (기준 = 경합 지역)	여당 유리 지역	-0.09 (0.55)			
	야당 유리 지역	-0.16 (0.47)			
(상수항)		2.36* (0.95)	-2.67 (2.88)	10.11* (4.93)	3.54** (1.35)
AIC		176.74	31.83	35.32	93.73
BIC		197.53	38.89	45.60	107.95
Log Likelihood		-81.37	-9.91	-11.66	-40.86
Deviance		162.74	19.83	23.32	81.73
사례 수(N)		144	24	41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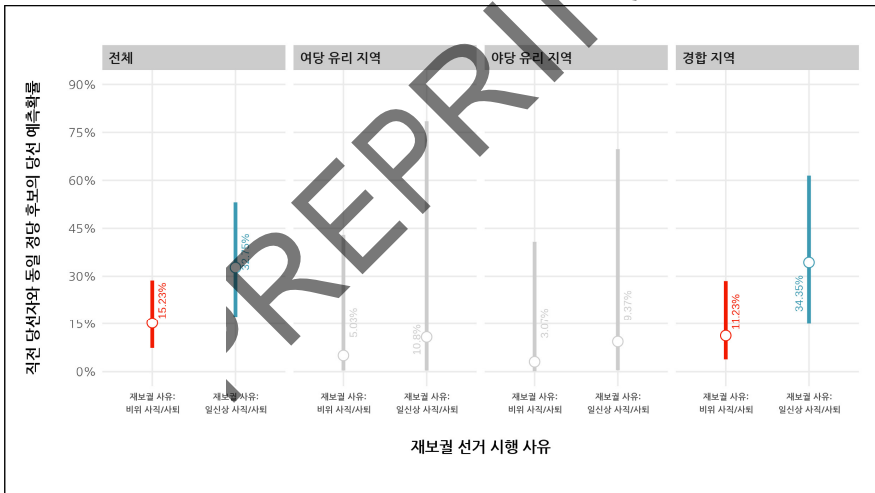
주: \*\*\*  $p < 0.001$ , \*\*  $p < 0.01$ , \*  $p < 0.05$ . 괄호 안은 표준오차.

〈그림 3〉은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라 전직자와 동일한 정당 소속의 후보가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 당선될 예측확률을 전체, 그리고 지역 균열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우선 전체 재·보궐 선거 사례 속에서 전직자가 비위를 저질러 실시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재·보궐 선거에 비해 전직자와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는 유의미하게 당선 예측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17.5%p 감소). 하지만 여당 유리 지역과 야당 유리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이와 같은 심판적 투표 선택 경향은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을 나누어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 나타난 경과일 수도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던 지역균열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 지역들에서 유권자의 심판 투표보다도 강력하게 투표 선택을 견인하는 요인일 가능성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합 지역의 경우, 비위로 인해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동일 정당 소속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약 23.1%p 감소). 이는 지역균열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 일종의 처벌적 투표 선택을 수행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림 3〉 재·보궐 선거 시행 사유에 따른 전직자와 동일 정당 후보의 당선 예측확률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투표 결과를 집합적 수준의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 또는 해당 재·보궐 선거구

의 직전 임기만료 선거에서 투표 참여 수준 등의 이론적 틀로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결과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다른 전국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재·보궐 선거에서는 다른 임기만료 선거와는 다른 정치적 정보가 주어진다. 바로 해당 재·보궐 선거가 시행된 사유이다. 지난 임기만료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및 선택이 왜 무효화되었고, 그들이 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재·보궐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이 임기만료 선거에서 제공되는 후보자들 또는 정당의 공약 및 정책, 후보자 개인의 약력 등의 정보에 비해 명확하며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투표 선택의 외부비용이 낮은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표 참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재·보궐을 시행하게 된 사유에 따라 합리적이되 근시안적 행위자로서 다른 임기만료 선거와 차별적인 투표 참여 및 선택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관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46개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은 불법적인 사유로 인해 전직자가 퇴진한 재·보궐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선택의 경우, 전직자의 불법적 행위, 비위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는 해당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의 당선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지역균열의 영향을 지적해온 선행연구에 따라 여당 유리 지역, 야당 유리 지역, 그리고 경합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지역균열이 선명한 재·보궐 선거구에서는 재·보궐 선거 사유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경합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의 시행 사유가 후보자의 당선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표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비위를 저질러 재·보궐을 실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전직자에 대해 그가 속한 정당을 일종의 책임성의 주체로 간주하고 심판적 투표를 하지만 그 관계는 지역균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선거구에서만 유효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보궐 선거가 중앙정치의 역학 또는 직전 임기만료 선거를 비례적으로 반영한다거나 선거구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직면한 선거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비위를 저지른 전직자에 대한 처벌성 투표 참여 및 선택과 같은 선거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보궐 선거의 시행 사유라는 특성이 재·보궐 선거의 투표 참여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에서 기존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이론적 설명과 분석 결과가 일련의 미시적 연구와 재·보궐 지방선거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3.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5, 213-233.
- 강원택.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10-1, 145-166.
- \_\_\_\_\_.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14-1, 31-58.
- \_\_\_\_\_. 2012.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4, 129-147.
-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EAI(동아시아연구원).
- 박명호. 2006. “재·보궐 선거 정치참여에 관한 시론.” 『한국정당학회보』 5-1, 129-146.
- 박명호·양병하. 2016. “지방 재·보궐 선거와 선거의 정치적 비중: 지방 재·보궐 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3-4, 229-244.
- 배은진·엄기홍. 2016.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경제투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6-2, 77-97.
- 신두철. 2007.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2005년 4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1, 71-86.
- 양병하·한기영. 2016. “한국의 재·보궐 지방선거 투표율 결정에 관한 연구.” 『OUGHTOPIA』 31-2, 223-255.
- 윤광일. 2013. “지역주의와 제18대 대선.” 『분쟁해결연구』 11-1, 101-131.
- \_\_\_\_\_. 2019.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5-2, 37-73.
- 윤기쁨·엄기홍. 2016. “사전투표제가 새로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동원하였는가?: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미래정치연구』 6-2, 31-53.
- 윤왕희. 2022. “‘비호감 대선’과 정당의 후보 경선에 관한 연구: 경선 방식과 당원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1-2, 83-120.
- 윤지환. 2022. “정치담론은 사라진 것인가, 삭제된 것인가?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21세기 정치학회보』 32-2, 1-20.
- 이내영·안종기.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한국정당학회보』 12-2, 5-36.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현대정치연구』 1-1, 111-136.
- 조성대. 2009. “투표 참여와 기권.” 전용주 외 지음.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20. “중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정당 선호순위와 전략적 분할투표에 관한 연구: 21대 한국 총선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54-5, 125-151.
- 조진만. 1998. “집권정부의 정치적 지지도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영삼 정권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0-1, 159-198.
- \_\_\_\_\_.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2, 5-34.
- 조진만·최준영. 2011.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 차이가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345-376.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75-98.
- 지병근. 2013. “호남지역에서 나타난 정당후보득표율의 지역편향: 제18대 대선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2-1, 141-173.
- 최준영·조진만. 2011. “변화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정치 대 지역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0-2, 133-156.
- 한정택. 2015. “4·29 재보궐선거의 결과 분석과 전망.” 『의정연구』 21-2, 33-58.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16.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Christopher J. 2007. “The End of Economic Voting? Contingency Dilemmas and the Limi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271-96.
- Anderson, Mary R., Christopher J. Lewis, and Chardie L. Baird. 2011. “Punishment or Reward? An Experiment on the Effects of Sex and Gender Issues on Candidate Choice.”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2-2: 136-57.
- Bratton, Michael, Robert Mattes, and E. Gyimah-Boadi. 2004. *Public Opinion, Democracy, and Market Reform in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nan, Jason and Lisa Hill. 2014. *Compulsory Voting: For and Against*.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chanan, James M.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leiro, António Bento. 2019. "On the Electoral Punishment/Rewarding of the Incumbent Can Voters Do It?" *Perspectivas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 33-44.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Vries, Catherine E. and Hector Solaz. 2017.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1: 391-408.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New York: Wiley.
- Escaleras, Monica, Peter T. Calagno, and William F. Shughart. 2012. "Corruption and Voter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US States." *Public Finance Review* 40-6: 789-815.
- Ferejohn, J. 1986. "Incumbent performance and electoral control." *Public Choice* 50: 5-26.
- Fernández-Vázquez, Pablo, Pablo Barbera, and Gonzalo Rivero. 2016. "Rooting Out Corruption or Rooting for Corruption? The Heterogeneous Electoral Consequences of Scandal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4-2: 379-397.
- Figueiredo, Miguel F. P. de, F. Daniel Hidalgo, and Yuri Kasahara. 2022. "When Do Voters Punish Corrupt Politicians? Experimental Evidence from a Field and Survey Experi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 Gerber, Alan S., Gregory A. Huber, David Doherty, and Conor M. Dowling. 2011. "Citizens' Policy Confidence and Electoral Punishment: A Neglected Dimension of Electoral Accountability." *The Journal of Politics* 73-4: 1206-1224.
- Golden, Miriam. 2005. "Some Puzzles of Political Corruption in Modern Advanced Democracies."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s of the Jap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kyo, Japan, October.

- Healy, Andrew and Gabriel S. Lenz. 2014. "Substituting the End for the Whole: Why Voters Respond Primarily to the Election-Year Econom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1: 31-47.
- Karahan, Gökhan R., R. Morris Coats, and William F. Shughart. 2006. "Corrupt Political Jurisdictions and Voter Participation." *Public Choice* 126-1: 87-106.
- Kim, HeeMin, Jun Young Choi, and Jinman Cho. 2008. "Changing Cleavage Structure in New Democracies: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 *Electoral Studies* 27-1: 136-150.
- Kim, Tae Wan. 2019. "Voting Behavior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 Exploring the Regional Voting Pattern." *Asian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8-3: 268-281.
- Kim, Youngmi and Sunhee Park. 2018. "Emerging Cleavages in Korean Society: Region, Generation, Ideology, and Class." In *Korea's Quest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Polarization and Contention*. ed. Youngmi Kim.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63-88.
- Lever, Annabelle. 2010. "Compulsory Voting: A Critical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4: 897-915.
- Przeworski, Adam. 1999. "A minimalist conception of democracy: a defense." In *Democracy's Value*. ed. I. Shapiro and C. Hacker-Cordon, 23-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cliff, Benjamin. 1994. "Reward Without Punishment: Economic Conditions and the Vo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3: 721-731.
- Saunders, Ben. 2012. "The Democratic Turnout 'Problem.'" *Political Studies* 60: 306-320.
- Simpser, Alberto. 2012. "Does Electoral Manipulation Discourage Voter Turnout? Evidence from Mexico." *The Journal of Politics* 74-3: 782-795.
- Stockemer, Daniel, Bernadette LaMontagne, and Lyle Scruggs. 2013. "Bribes and Ballots: The Impact of Corruption on Voter Turnout in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4-1: 74-90.

- Sundström, Aksel and Daniel Stockemer. 2015. "Regional Variation in Voter Turnout in Europe: The Impact of Corruption Perceptions." *Electoral Studies* 40: 158-169.
- Vuković, Vuk. 2020. "Corruption and Re-Election: How Much Can Politicians Steal before Getting Punished?"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8-1: 124-143.
- Weschle, Simon. 2016. "Punishing Personal and Electoral Corruption: Experimental Evidence from India." *Research & Politics* 3-2: 1-6.
- Winters, Matthew S. and Rebecca Weitz-Shapiro. 2013. "Lacking Information or Condoning Corruption: When Do Voters Support Corrupt Politicians?" *Comparative Politics* 45-4: 418-436.

투고일: 2022년 8월 3일, 심사일: 2022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8일



## 부록

〈표 A1〉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 및 투표율 현황: 1989-04-14 ~ 2022-06-01

선거일	시도	선거구	재·보궐 사유	투표율(%)
1989-04-14	강원도	동해시	당선무효	79.1
1989-08-18	서울시	영등포을	당선무효	69.8
1990-04-03	대구시	서구갑	사퇴	63.9
1990-04-03	충청북도	진천음성군	사망	78.2
1990-11-09	전라남도	영광함평군	당선무효	70.2
1993-04-23	부산시	동래구갑	사직	40.4
1993-04-23	부산시	사하구	당선무효	42.1
1993-04-23	경기도	광명시	사망	41.2
1993-06-11	강원도	명주양양군	사퇴	68.5
1993-06-11	강원도	철원화천군	사퇴	66.0
1993-06-11	경상북도	예천군	사퇴	71.3
1993-08-12	대구시	동구을	사퇴	60.2
1993-08-12	강원도	춘천시	사망	58.5
1994-08-02	대구시	수성갑	당선무효	46.3
1994-08-02	강원도	영월평창군	사망	63.1
1994-08-02	경상북도	경주시	사망	49.7
1997-03-05	인천시	서구	사망	37.3
1997-03-05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사망	32.7
1997-07-24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당선무효	63.1
1997-07-24	충청남도	예산군	당선무효	68.5
1997-09-04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사망	33.1
1997-12-28	광주시	동구	사망	무투표당선
1998-04-02	부산시	서구	당선무효	45.7
1998-04-02	대구시	달성군	사직	59.4
1998-04-02	경상북도	문경시에천군	당선무효	66.3
1998-04-02	경상북도	의성군	당선무효	73.9
1998-07-21	서울시	종로구	사직	33.7
1998-07-21	서울시	서초구갑	사직	37.6
1998-07-21	부산시	해운대구기장군을	사직	58.3
1998-07-21	대구시	북구갑	사직	39.8
1998-07-2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사망	26.2

74 한국정당학회보 제21권 제3호 2022년(통권 56호)

선거일	시도	선거구	재·보궐 사유	투표율(%)
1998-07-21	경기도	광명시을	사직	50.8
1998-07-21	강원도	강릉시을	당선무효	54.6
1999-03-30	서울시	구로구을	당선무효	40.8
1999-03-30	경기도	시흥시	사망	32.2
1999-06-03	서울시	송파구갑	당선무효	46.4
1999-06-03	인천시	계양구강화군갑	당선무효	35.2
2001-10-25	서울시	동대문구을	선거무효	45.6
2001-10-25	서울시	구로구을	당선무효	39.4
2001-10-25	강원도	강릉시	사직	41.0
2002-08-08	서울시	종로구	당선무효	28.9
2002-08-08	서울시	금천구	당선무효	24.3
2002-08-08	서울시	영등포을	사직	24.0
2002-08-08	부산시	부산진갑	당선무효	29.1
2002-08-08	부산시	해운대기장갑	사망	18.8
2002-08-08	인천시	서구강화군을	당선무효	34.0
2002-08-08	광주시	광주북구갑	사직	22.4
2002-08-08	경기도	광명시	사직	30.4
2002-08-08	경기도	하남시	당선무효	36.3
2002-08-08	경기도	안성시	사망	43.5
2002-08-08	전라북도	군산시	사직	33.2
2002-08-08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당선무효	29.6
2002-08-08	제주시	북제주군	당선무효	57.6
2002-12-19	울산시	중구	사망	68.9
2003-04-24	서울시	양천구을	사직	26.4
2003-04-24	경기도	의정부시	사직	26.0
2003-04-24	경기도	고양시덕양구갑	당선무효	25.6
2005-04-3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당선무효	29.1
2005-04-30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당선무효	38.1
2005-04-30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	당선무효	37.9
2005-04-30	충청남도	아산시	당선무효	32.0
2005-04-30	경상북도	영천시	당선무효	59.1
2005-04-30	경상남도	김해시갑	당선무효	34.2
2005-10-26	대구시	동구을	당선무효	46.9
2005-10-26	울산시	북구	당선무효	53.2
2005-10-26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당선무효	28.9

선거일	시도	선거구	재·보궐 사유	투표율(%)
2005-10-26	경기도	광주시	당선무효	36.7
2006-07-26	서울시	성북구을	당선무효	28.9
2006-07-26	서울시	송파구갑	사직	18.1
2006-07-26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사직	22.6
2006-07-26	경상남도	마산시갑	당선무효	28.8
2006-10-25	인천시	남동구을	피선거권상실	24.7
2006-10-25	전라남도	해남진도	피선거권상실	40.5
2007-04-25	대전시	서구을	사망	34.6
2007-04-25	경기도	화성시	피선거권상실	19.3
2007-04-25	전라남도	무안신안	피선거권상실	54.4
2009-04-29	인천시	부평구을	선거무효	29.1
2009-04-29	울산시	북구	선거무효	46.7
2009-04-29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갑	선거무효	37.8
2009-04-29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선거무효	38.4
2009-04-29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무효	53.8
2009-10-28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선거무효	35.8
2009-10-28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선거무효	29.3
2009-10-28	강원도	강릉시	선거무효	40.3
2009-10-28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군	피선거권상실	42.9
2009-10-28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무효	43.9
2010-07-28	서울시	은평구을	당선무효	40.5
2010-07-28	인천시	계양구을	사직	23.2
2010-07-28	광주시	남구	사직	28.7
2010-07-28	강원도	원주시	사직	28.7
2010-07-28	강원도	태백시영월군평창군 정선군	사직	45.1
2010-07-28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인제군	사망	47.4
2010-07-28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	43.6
2010-07-28	충청남도	천안시을	사직	24.3
2011-04-2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사직	49.1
2011-04-27	전라남도	순천시	당선무효	41.1
2011-04-27	경상남도	김해시을	당선무효	41.5
2013-04-24	서울시	노원구병	의원직상실	43.5
2013-04-24	부산시	영도구	당선무효	36.0

선거일	시도	선거구	재·보궐 사유	투표율(%)
2013-04-24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당선무효	44.2
2014-07-30	서울시	동작구을	사직	46.8
2014-07-30	부산시	해운대구기장군갑	사직	22.9
2014-07-30	광주시	광산구을	사직	22.3
2014-07-30	대전시	대덕구	사직	32.7
2014-07-30	울산시	남구을	사직	29.1
2014-07-30	경기도	평택시을	당선무효	29.8
2014-07-30	경기도	수원시을	당선무효	27.2
2014-07-30	경기도	수원시병	사직	30.8
2014-07-30	경기도	수원시정	사직	31.1
2014-07-30	경기도	김포시	사직	35.8
2014-07-30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당선무효	33.0
2014-07-30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	33.1
2014-07-30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	사직	31.6
2014-07-30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당선무효	34.6
2014-07-30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피선거권상실	51.0
2015-04-29	서울시	관악구을	의원직상실	36.9
2015-04-29	인천시	서구강화군을	당선무효	36.5
2015-04-29	광주시	서구을	의원직상실	41.1
2015-04-29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의원직상실	31.5
2017-04-12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원성군 청송군	당선무효	51.7
2018-06-13	서울시	노원구병	사직	61.6
2018-06-13	서울시	송파구을	당선무효	62.9
2018-06-13	부산시	해운대구을	사직	57.9
2018-06-13	인천시	남동구갑	사직	54.5
2018-06-13	광주시	서구갑	당선무효	59.1
2018-06-13	울산시	북구	당선무효	65.5
2018-06-13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당선무효	63.3
2018-06-13	충청남도	천안시갑	당선무효	48.6
2018-06-13	충청남도	천안시병	사직	55.2
2018-06-13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당선무효	71.4
2018-06-13	경상북도	김천시	사직	70.0
2018-06-13	경상남도	김해시을	사직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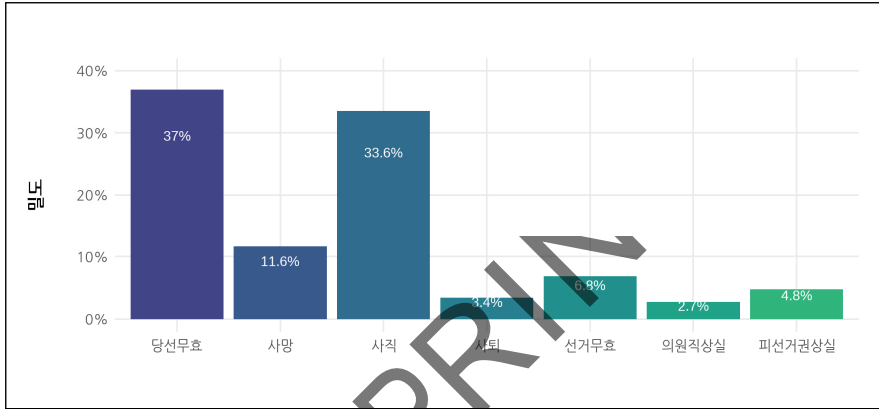
선거일	시도	선거구	재·보궐 사유	투표율(%)
2019-04-03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사망	51.2
2019-04-03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피선거권상실	51.2
2022-03-09	서울시	종로구	사직	76.4
2022-03-09	서울시	서초구갑	사직	79.5
2022-03-09	대구시	중구남구	사직	76.0
2022-03-09	경기도	안성시	당선무효	72.0
2022-03-09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당선무효	74.8
2022-06-01	대구시	수성구을	사직	45.0
2022-06-01	인천시	계양을	사직	60.1
2022-06-0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사직	63.8
2022-06-01	강원도	원주시갑	사직	51.1
2022-06-01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사직	62.0
2022-06-0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사직	51.5
2022-06-01	제주시	제주을	사직	55.4

(표 A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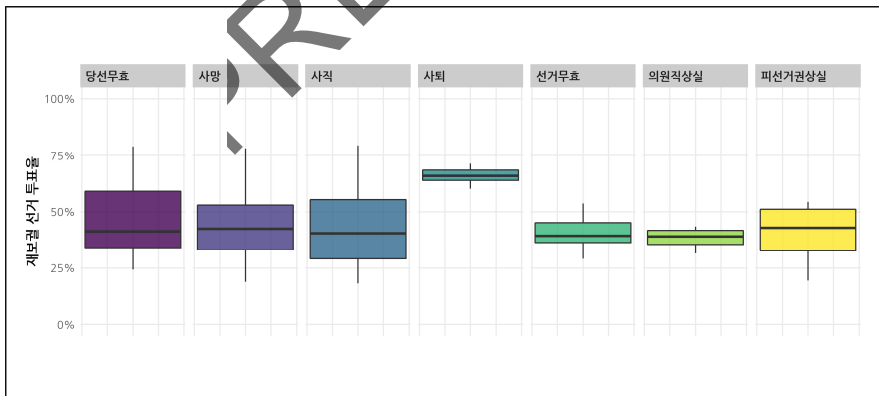
변수명	사례 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재·보궐 투표율	145	44.71	15.58	41.24	18.12	79.47
재·보궐 사유	일신상/비위로 자진 사퇴	72	0.49			
	비위로 인한 강제 사퇴	74	0.51			
	선거중요도	146	0.25	0.21	0.20	0.07
Log(인접 총선일)	146	6.52	0.33	6.48	5.76	7.04
대통령 지지도	146	43.75	20.36	43.00	8.70	86.50
지역주의	경합 지역	80	0.55			
	여당 지지 지역	24	0.16			
	야당 지지 지역	42	0.29			
선거 경합도	145	66.86	21.16	68.73	17.84	98.82
직전 총선 투표율	146	59.37	9.68	58.76	36.52	85.06
사전투표제	145	0.34	0.47	0.00	0.00	1.00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의 재당선 여부	146	0.33	0.47	0.00	0.00	1.00

변수명	사례 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당선자 당적	여당	64	0.44			
	야당	82	0.56			
당선자 선수	146	1.77	1.29	1.00	1.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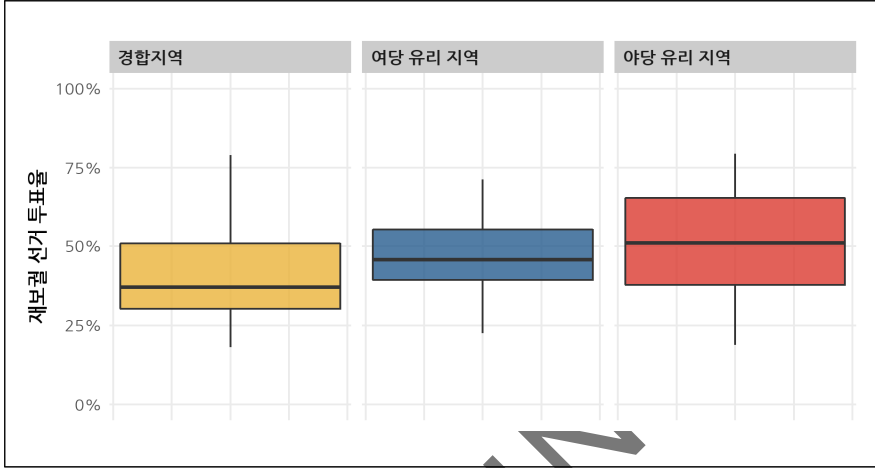
〈그림 A1〉 재·보궐 시행 사유의 분포



〈그림 A2〉 양변량 분석: 재·보궐 시행 사유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의 분포



〈그림 A3〉 양변량 분석: 지역균열에 따른 재·보궐 선거 투표율의 분포



REPRINT

## ABSTRACT

# Effect of Reasons for Re/by-election on Voting Participation and Outcom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Re/by-elections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fter Democratization

Park, Sanghoon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sons for re/by-election as a factor influencing voting participation and the result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re/by-election after democratization. Existing research examines the re/by-election of a National Assembly as a kind of complementary and subordinate election to national elections, employing the midterm evaluation model, the election campaign model, or the turnout model. This paper argues that voters will participate in and vote in order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re/by-elections accountable. According to the findings, voters are more likely to vote when incumbents resign due to illegal behavior than when incumbents resign for personal reasons. Furthermore, when an incumbent party re-appointed a candidate for a re/by-election despite previous incumbents resigning due to illegal behavior, voters are more likely to reject that party's candidate. Using a new variable of the reason for the re/by-elec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voters participate in and choose to vote in order to hold the political elite accountable for the re/by-election.

---

**KeyWords** | re/by-elections, voter turnouts, voting participations, voting choices, electoral accountability